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영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38
----------	------

발의연월일 : 2024. 9. 30.  
발 의 자 : 홍영진, 김도운, 김태욱,  
이명녀, 안영호, 박경흠,  
문희성, 강혜순, 정재환,  
문기호

1. 개정이유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절이 시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국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조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7조)
- 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관계법령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5. 참고사항

- 가. 조례안 예고: 2024. 9. 24. ~ 9. 30.(6일간) / 의견없음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을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로, “규정함”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4.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5.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각목의 피해를 말하며,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포함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을 “매년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피해자 보호)”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로, “추진할”을 “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디지털 성범죄”를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으로, “심리 치료”를 “심리치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디지털 성범죄”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으로 한다.

2.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방지 활동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홍보)”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람의 신체</u>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된 ‘<u>디지털 성착취물</u>’의 유포, 확산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u>규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디지털성범죄</u>”란 <u>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 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의·비동의 성(性)적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u></p>	<p>제1조(목적) ----- <u>디지털기기</u>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u>성범죄의</u> ----- ----- ----- <u>규정하고</u>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u>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u>---.</p> <p>제2조(정의) ----- -----.</p> <p>1. “<u>디지털성범죄</u>”란 다음 각 <u>목</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가. 「<u>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u>」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p> <p>나.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p> <p>다.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u></p>

<p>2.·3.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피해자 보호) ① 구청장은 <u>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u></p>	<p><u>를」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u></p> <p><u>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u></p> <p>2.·3. (현행과 같음)</p> <p>4. “피해자”란 <u>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u></p> <p>5.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각목의 피해를 말하며,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포함한다.</p>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 ----- <u>매년 수립·시행</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7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 <u>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u></p>
---	---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  
에 대한 심리 치료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신 설>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  
·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보호·지원을 위하여 -----  
----- 할 -----.

1. 피해자 -----  
-----
2.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  
후 모니터링 지원
3.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  
----- 심리치료
4. 피해자 -----  
--
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목욕장·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방  
지 활동

7. ----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  
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  
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 계 법 령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  
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동 조례안은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 3. 작성자

- 소 속: 가족복지과
- 직 급: 지방사회복지주사보
- 이 름: 전윤선
- 연락처: 052-290-4903